이슈페이퍼
24-7호
디지털경제연구원

# 트럼프 2기, 플랫폼의 운명은?

권재한 책임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원

## 요약

▶ 미국 신보호주의에 기반한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 정책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단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잡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글로벌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제약을 가함

▶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5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한국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통상마찰 가능성을 경고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AGA' 기조를 유지하며, 빅테크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은 미국으로부터 더 강도 높은 통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플랫폼 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K-internet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 서론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은 글로벌 IT 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312표를 획득하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승리, 트럼프는 130여 년 만에 재선에 실패했다가 다시 당선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
- AI 규제 완화, 빅테크 기업 감독 완화, 대중국 제재 강화, 미국 기술 주도권 강화, 실리콘밸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의 트럼프 공약들은 글로벌 IT 산업의 규제 환경, 경쟁 구도, 기술 개발 방향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Fortune, 2024)

▶ 글로벌 IT 산업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내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그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별 플랫폼 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미국의 플랫폼 정책 기조

##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 미국 우선주의

▶ 미국의 주도권 강화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로 인해 글로벌 기술 산업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

- (미국 우선주의)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웠으며, 이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미국의 기술 우위 확보와 국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중국 견제)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 행정기관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등 투자 규제 강화, 기술 보호주의 확대로 인해 중국 기업(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등)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INSS, 2020)
- (자국 산업 보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본국 회귀 촉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해외 기업 과세 부과 등을 추진(KIEP, 2021)

▶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미국 기업들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 중국 기업인 틱톡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압박하고,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함(NewYork Times, 2024)
- 구글과 메타 등 자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음(NewYork Times, 2024)

▶ 미국 빅테크 보호 기조는 국내외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와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글로벌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제약을 가함

- (플랫폼 수수료) 2020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를 30% 수준으로 운영해 국내외 개발사의 수익성이 악화
- (데이터 주권) 2018년 CLOUD Act 제정으로 미국 법원이 해외 서버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해 AWS, 구글 클라우드 등 미국 빅테크의 의존도를 심화
- (시장 진출) 미국 시장 진출 시 CFIUS* 심사 강화, 보안 심사 강화, 투자 제한 등

*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기구이며,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심사

## 바이든 행정부(2021~2025) : 자국 보호주의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을 지원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점적 플랫폼 기업들을 경계하는 선별적 투트랙 전략을 추구

- CHIPS Act*를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과 달리,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대상으로 접근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실행

* CHIPS Act : 2022년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2,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법안

-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독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를 추진(Fortune, 2023)
- 숨겨진 수수료(junk fees) 근절을 위한 규제 도입,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규제, 앱스토어 외 대체 다운로드 경로 허용 교수, 인앱결제 강제 관행 개선 추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The Hill, 2023)

▶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5대 규제 패키지 법안(부록1)을 추진하였으나, AICO를 제외한 모든 법안이 폐기되었으며, AICO 또한 현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규제 패키지 법안이 폐기된 원인으로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았으며, 하원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합의 도출을 실패(ETRI, 2021)
- AICO(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는 2023년 6월 재발의 하였으나, 법안은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다양한 우려를 받고 있으며(Springboard, 2023), 현재도 보안, 글로벌 경쟁력, 콘텐츠 조정 문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법안은 여전히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TECHNET, 2024)

▶ 또한 미국은 한국 플랫폼 규제법이 글로벌 디지털 무역 자유화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통상마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 미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상대적 이점 제공에 우려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및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함(VOA, 2024)

* 2024년 9월 27일,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

* 2024년 10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추진과 관련해 "모든 조치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 그 외에도 미국 국무부·상무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행정부 국가안보보좌

관,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플랫폼 규제법에 따른 한-미 통상마찰 우려(부록2)

## 미국의 신보호주의

▶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 기술·데이터·안보를 앞세운 '신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하였으며,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 기조를 유지하며 성장을 견인함

-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교역과 해외 자본을 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육성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자원의 무기화와 산업스파이를 통한 기술 탈취도 이루어지고 있음(서울경제, 2024)
-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시장 침투를 막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틱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
-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 특히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제한되어 미국 기업들의 이점이 확대(ABC News, 2024)
-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안정적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몰리게 하는 효과 발생해 Magnificent 7에 대한 투자 선호도 상승(Investopedia,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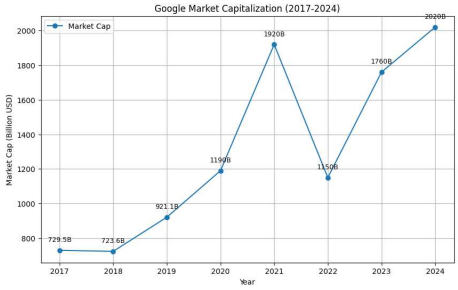
  * Magnificent 7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 글로벌 빅테크 시가총액 변동(십억달러) : (구글) 730('17) → 2,020('24.11), (애플) 809('17) → 3,510('24.11), (메타) 513('17) → 1,493('24.11), (아마존) 577('17) → 2,121('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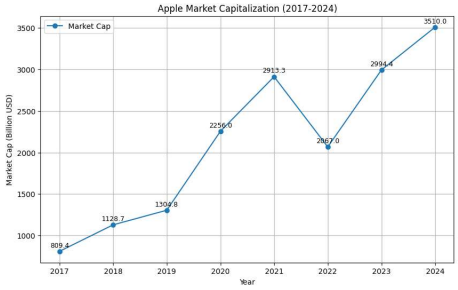
※ 2022년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8% 이상 치솟은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스닥 지수가 전년 대비 -33.1% 감소

〈그림 1〉 미국 주요 빅테크 시가총액 추세(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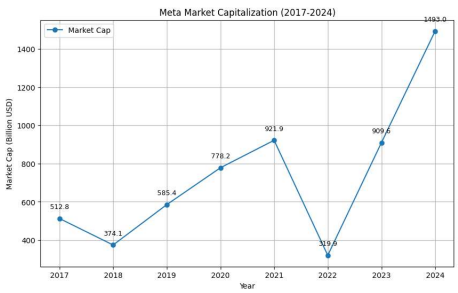
<Google Market Capitalization(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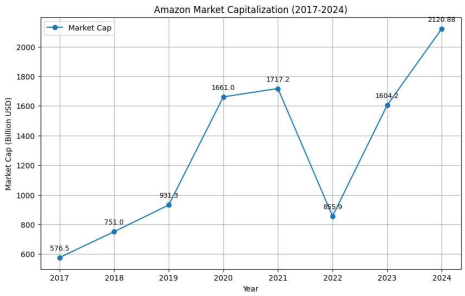

<Apple Market Capitalization(2017-2024)>




<Meta Market Capitalization(2017-2024)>




<Amazon Market Capitalization(2017-2024)>




*2017~2023년 수치는 연말 기준, 2024년 수치는 2024.11.25. 기준

# 트럼프 2기 행정부(2025~) 출범과 디지털 정책 전망

## ▶ 트럼프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즉흥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 기조로 인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 틱톡 금지법안*이 미국 의회를 초당적으로 통과했다는 점과 중국 직구 플랫폼이 공격적인 시장 확대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음(법무법인 율촌, 2024)

  * 틱톡 금지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금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이번 개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트럼프 선거캠프도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트럼프 취임 이후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되지 않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디지털데일리, 2024)

- 그러나, 트럼프는 차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로 불리는 브렌던 카 공화당 위원을 임명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불확실한 기조를 이어오고 있음

〈그림 2〉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 빅테크 규제는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기조는 2기에도 유지될 것이며, 경제 및 기술 정책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

  * MAGA 기조는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 자국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강화 등을 포함

- 구글 분할 이슈가 미국의 대중국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트럼프는 구글 해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CIO, 2024)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익 우선주의라는 큰 명분 아래 빅테크 규제에 한층 완화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한겨레, 2024)

- 트럼프는 AI 개발에 있어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AI 관련 행정명령(2023)을 철회하고 자유로운 AI 개발 환경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큼(Cybersecuritydive, 2024)

# 시사점

▶ 미국 신보호주의에 기반한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 정책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단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잡음

▶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시 데이터 현지화 요구나 소스 코드 공개 의무 등 추가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초래해 해외 진출 가능성을 제한함
- 또한 미국의 보호주의는 기술 경쟁에서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다른 국가의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국과 같은 제3국의 기술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은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도 높은 통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통상법 301조' 조사나 관세 보복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특별법 제정 등 규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며, 법안에는 규제 대상으로 구글과 애플이 포함되고 있음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안은 총 16건이 발의,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2건의 70%에 해당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수치(전자신문, 2024.10.23. 기준)

- 2024년 9월, 미국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위 법안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반독점으로 포장됐으나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 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 또한 한국이 중국의 테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연합뉴스, 2024)

  * 또한, 위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연합뉴스, 2024)

- '통상법 301조'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WTO 분쟁 제소, 무역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양자 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미국의 규제 완화 기조와 한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양국 플랫폼 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I 기본법 및 플랫폼 규제법은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시정명령 리스크 등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부담을 가중
-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 기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지원, 플랫폼 규제 강화보단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신보호주의 시대, 플랫폼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너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

-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2017년 이후 신보호주의 기조를 통해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보호·육성해왔으며, 이는 플랫폼 경쟁력이 국가 경제력과 기술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시사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클라우드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함
- 이는 단순한 보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부록1

〈표 1〉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 법안 | 핵심내용 |
|---|---|
|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H.R.3816) | 지배적 플랫폼들에 의한 차별적인 행동을 금지(자기 우대 및 승자·패자 골라내기 금지 포함)<br>- D. N. Cicilline 발의, L. Gooden 공동 발의 |
|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H.R.3826) | 지배적 플랫폼들에 의한 경쟁 위협 기업 인수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력을 확대하거나 고착시키는 인수를 금지<br>- H. Jeffries 발의, K. Buck 공동 발의 |
| 플랫폼 독점 종식법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H.R.3825) | 지배적 플랫폼들이 여러 사업 분야에 걸친 통제력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자기 우대하고 경쟁사를 불리하게 하는 능력을 제거<br>- P. Jayapal 발의, L. Gooden 공동 발의 |
|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H.R.3849) |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요구를 통해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과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경쟁을 촉진<br>- M. G. Scanion 발의, B. Owens 공동 발의 |
|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Merger Filng Fee Modernization Act, H.R.3843) | 합병신청 수수료를 갱신하여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br>- J. Neguse 발의, V. Spartz 공동 발의 |

* ETRI(2021), 미국의 반족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 부록2

〈표 2〉 국내 플랫폼 규제법에 따른 미국의 우려

•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은 공정위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미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23.12.18.)

•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디지털 독점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완전한 공정 규제로 양국 경제 혁신 극대화를 바란다."고 발언('23.12.19.)

•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발언('23.12.29.)

•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DMA 유사 법안을 추진중"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함('24.1.11.)

• 미 국무부와 상무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플랫폼법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하며 이 법이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면 안된다고 전달('24.1.17.)

•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 플랫폼법은 디지털 시장을 요람 안에 가두어 목 졸라 죽일 수도 있다"고 발언('24.1.20.)

•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플랫폼 규제법이 "심각한 결함을 지녔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겨냥해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경고('24.1.30.)

•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한 방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투명성 보장과 이해관계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발언('24.1.31.)

•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24.9.27.)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추진과 관련해 "모든 조치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24,10.8.)

## 참고문헌

- CIO(2024), 트럼프, 구글 분할 반대…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악영향"(2024.10.17.)
https://www.cio.com/article/3567496/%ED%8A%B8%EB%9F%BC%ED%94%84-%EA%B5%AC%EA%B8%80-%ED%95%B4%EC%B2%B4-%EB%B0%98%EB%8C%80%C2%B7%C2%B7%C2%B7-%EC%A4%91%EA%B5%AD%EA%B3%BC%EC%9D%98-%EA%B8%B0%EC%88%A0-%EC%A0%84%EC%9F%81%EC%97%90.html
-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0),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 VOA(2024), 미 무역대표부 "한국 플랫폼법 추진 주시 중…경쟁 촉진 목표" (2024.10.9.)
https://www.voakorea.com/a/7815319.html
- 뉴시스(2024), '美 퇴출 위기' 틱톡, 기사회생할까…"트럼프가 막는다 약속"(2024.11.1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3_000295777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디지털데일리(2024), "틱톡 구하려면 내게 투표하라"던 트럼프, 틱톡 금지법 뒤집을까(2024.11.13.)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1113171010946 27
- 법무법인 율촌(2024),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 삼정KPMG(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 서울경제(2024), 신보호주의 시대, 국익 지키기 위한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 짜야(2024.3.16.)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NNLL171
- 연합뉴스(2024), 美의원 "韓 플랫폼법안 美기업 차별…시행시 통상법 301조 조사"(2024.9.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930006100071
- 전자신문(2024), 국회, 플랫폼 규제 입법 폭주…5개월 만에 16건 무더기 발의(2024.10.23.)
https://www.etnews.com/20241023000247
- 한겨레(2024), [트럼프 2기] 미 자국 우선주의에 '반독점 칼날' 무뎌지나?(2024.11.1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6958.html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1), 미국의 반독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 ABC News(2024), Why is the Biden administration going after Big Tech? (2024.3.23.)
https://abcnews.go.com/Business/biden-administration-after-big-tech/story?id=108385698
- Cybersecurity Dive(2024), 4 tech issues to watch in Trump's second term(2024.11.7.)
https://www.cybersecuritydive.com/news/4-tech-policies-donald-trump/732266/
- Fortune(2023), Biden takes aim at Apple and Google's app stores as 'harmful to consumers and developers'(2023.1.1.)
https://fortune.com/2023/02/01/biden-apple-google-app-stores-harmful-to-consumers-developers-antitrust-commerce-department/
- Fortune(2024), Trump 2.0 will have a massive impact on Big Tech, AI, chips and more—in Silicon Valley and beyond(2024.11.6.)
https://fortune.com/2024/11/06/trump-2-0-will-have-a-massive-impact-on-big-tech-ai-chips-and-more-in-silicon-valley-and-beyond/
- NewYork Times(2024), Tech Giants Face a Familiar Uncertainty With Trump(2024.11.7.)
https://www.nytimes.com/2024/11/07/technology/trump-apple-amazon-google-meta.html
- TECHNET(2024), 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Would Hurt America's Economy
- The Hill(2023), Biden administration urges Congress to level playing field with Google, Apple(2023.1.2.)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3839217-biden-administration-urges-congress-to-level-playing-field-with-google-apple/